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형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아주대 석좌교수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

전구 발명자의 흔적은 중국으로 넘어갔고,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던 후발 주자 하이얼은 GE라는 브랜드의 날개를 달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중국은 이제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 경쟁력으로 세계 선두를 다투는 나라다. 올해 초의 CES에서도 중국 기업들은 유인 드론처럼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가진 첨단 제품을 여럿 보여 주었다.

전기가 발명되고 나온 초기 전구들은 실제 사용에 문제가 많았다. 인내심을 무기로 최적이 전구 필라멘트와 내부 기체를 찾아낸 토마스 에디슨은 그래서 백열 전구의 발명자라고 불린다. 그의 에디슨 전기회사를 병합한 제너럴 일렉트릭(GE)은 기전으로 출발해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는 거대 다국적 기업이 됐다. GE는 20세기 온갖 혁신의 대명사였지만 한때 거센 기업 간 경쟁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좌초의 위기도 맞았다. 잿 옹기라는 걸출한 경영자가 이를 해결하고 거대기업으로 성장시킨 얘기는 현대 판 영웅담으로 회자된다. 그런 GE의 거전사업부를 중국 가전회사인 하이얼이 얼마 전에 인수했다. 백열

중국 의 부상 이면에 있는 내용과 전략도 놀랍다. ICT 만능주의의 ‘문지 마 투자’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전 영역에서 인재를 기르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해외의 과학기술 인재 1000명을 유치해서 엄청난 수준의 대우와 연구비를 제공한다는 ‘천인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고, 당장의 먹고 사는 것과 관계없는 순수 수학 분야에서 전설적인 기하학자와 젊은 천재 정수론 학자 등이 이미 자리를 잡았다. 최강인 자국의 국내 박사 지원책인 ‘박사후 혁신 인재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의 중대 전략, 첨단기술, 기초과학 분야의 신규 박사 수백 명을 매년 선발해서 최고의 인재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대졸자 초봉의 2~3배에 달하는 지원과 함께 관련 기업에 취업 추천도 하며 외국인 인재의

영구 거류증 발급도 쉽게 했다. 외국 유학생의 창업과 영구 정착을 위해 취업 제한을 풀고 영주권 신청 자격도 확대했다. 마윈의 알리바바가 무서운 것은, 인터넷에서 물건 파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IT 시대를 넘어서 DT(Data Technology) 시대의 도래를 이해하고 주도하는 헤안과 리다십 때문이다. 이러한 큰 그림을 실제로 구현할 인재들이 무성해 커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성장 전략에 대한 고민은 간단치 않다. 인적 물적 규모의 토대 위에 어느새 치고 올라온 중국과는 차별화가 불가피하다. 메이지 유신 이래로 나름의 역사성을 가지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일본과도 다르다. 노벨상 분석을 하면서, 일본 내 교육을 받은 노벨상 수상자의 수가 많은 걸 들어서 로컬한 자체 연구가 노벨상의 비밀이라고 결론 내는 경우가 있다. 근대 일본의 역사성을 간파한 채로, 글로벌 과학과 일본의 과학을 별개로 보는 예외도 보인다. 작년 중국의 약초 연구 노벨상 수상처럼 국지성이 돋보이는 예외적 경우가 있다 해서, 선부는 일반화로 과학기술의 글로벌화라는 숙제를 쉽게 건너뛸 순

않다. 물론 기초과학의 단단한 토대 없이 응용과학만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은 자살 시도에 가깝다. 전기나 무선통신의 출현 같은 근본적 변화의 시기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무지한 채로 선진국의 시혜에 의존하며 속수무책으로 당할 테니까. 알파고 충격에 대응한다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자체 연구력 없이 슈퍼컴과 데이터만 확보하려 한다면 영유향한 따라잡기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기초부터 탄탄히 해서 산업의 성장으로 점진적으로 이어 가자는 주장도 상투적이고 진부한 클리셰다.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후발 주자의 장점을 못 살리니 좋은 전략도 아니다. 기초 분야에서 응용과학까지 전 영역에서 인재를 기르는 전략을 세우되, 분야 간 상호 연계에 주목해야 한다. 넘쳐나는 맞춤형 교육과 맞춤형 프로그램은 이제 잊자. 무작정 여러 분야를 묶어서 융합으로 부르는 것도 곤란하다. 특정 분야에 묶이지 않는 유연한 소양을 인재를 길러서, 필요에 따라 연계된 분야에도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종교칼럼

가정이란?



연광 중심사주지·광주불교연합회장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의 가정은 산업 사회가 돼버리고, 핵가족 사회가 되면서 가정 윤리가 파괴되고, 그와 함께 인간관계도 무질서하게 변해버렸다. 옛 어른들이 “윗사람을 공경할 줄 알아야, 아랫사람을 거느릴 줄 안다”는 말씀을 한다. 윗사람을 공경함은 내가 공경 받는 자를 길이라고 했다. 부모에게 내가 효도하는 모범을 보여야 장차 내가 자식의 계도 효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가정이 먼저 행복해져야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도 또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행복했던 가정에 이혼소송이 벌어지고, 아이들은 방황하고,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의 고통과 자아상실이 빚어내는 현실은 가족동반 자살, 자녀살인 및 자살로 이어져 가정파괴는 물론이며, 생명조차도 경시하는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인간 질서의 근본을 이루는 사랑과 예절과 공경 같은 덕목들에 대한 교육만큼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회복한 가정을 복원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의 본래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의 교육적 기능부터 회복해야 한다. 요즘처럼 가정이 단순한 먹고 자기만 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정신적으로도 도덕적인 가치를 키워 나갈 수 있는 공

간으로 분위기도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를 보면 가정이 보존되는 게 커녕 이런저런 이유로 가정이 파괴돼 가는 모습들을 수 없이 보게 된다. 인과(因果)의 법칙으로 본다면 가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있기에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최소 단위 혈연조직으로서 행복의 생이요, 도덕과 문화의 학습장이 되어 할 소중함 우리의 가정이 가족 간의 갈등이나 뜻밖의 사건과 사고로 인해 붕괴의 고통을 겪게 된다면 앞서 말한 전통적 가정 기능을 상실하게 함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 구성원이나 우리 사회에 커다란 사회문제로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가정 파괴로 인해 자녀들의 인성은 날로 황폐화 돼가고, 사회적 불안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 되면서 가정에서 어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정에 규율도 질서도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옛날 같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고 무릎에 누워 들었던 읍직한 집안의 가풍이 무엇인지, 누웠을 때 어떤 자세로 자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잘 배우지 못하고 자란 것이다. 어떤 교육학자가 말하기를 “가정교육은 가르치는 것보다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부모들은 맞벌이 직장생활 등을 이유로 집안에서 자녀와 대화할 기회조차도 박탈당하

고 말았다. 때문에 자녀들은 홀로 남아 게임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사회는 엄청나게 발전해 경제적으로는 풍족한데 비해서 정신적으로는 황폐화돼 버렸다. 예전의 대가족 제도에서 자연스럽게 교육받을 수 있었던 내용들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성세대인 부모들부터 생각을 바꿔야 한다. 한 나라에는 문화풍토가 있어서 국민성이 형성되는 것처럼, 학교에는 학풍이 있어야 하고, 가정에는 가풍이 살아 숨 쉬어야 한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파괴를 막고 가정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가정에 모델이 될 만한 ‘가훈(家訓)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어떤가 싶다. 가훈(家訓)은 한 집안에서 지켜지는 법도이며 규율이다. 각 집안마다 내려오는 전통적인 가풍이 존재하고, 그 가풍이 대대손손 이어진다면 우리사회의 법질서나 윤리의식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 “생선을 산 중이에는 비린내가 나고, 향을 산 중이에는 향내가 난다.” 우리 가정에 이러한 새로운 가풍의 향 기운이 넘칠 때 저절로 회복한 가정은 이루어질 것이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세월호 2주기 참사를 모든 이들이 잊지 않기를 바라며, 두 번 다시는 이런 참사로 인해 소중한 가정이 파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랄뿐이다.

기고

선생님의 제자사랑이 그림자



전상훈 광주첨단교장

이런저런 이유로 결석을 밥 먹듯 하는 아이나 학교부적응이 심한 학생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가 한두 번 문제해결을 시도해보다가 힘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편한 방식을 택하기로 하면 학생부장에게 말해서 ‘몰치 아파 죽을 지경이니 교칙대로 처리해버려라’는 식으로 떠넘겨 버리면 된다. ‘공’을 넘겨받은 학생부장은 잠시 고민해보다가 학생처벌에 따르는 반발과 학부모 민원 부담 등을 감수하기 싫다면 교육청이 지정한 대안교육기관이나 외부 상담기관에 위탁조치 해버림으로써 급한 불을 끌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해법은 미봉책일 뿐, 결코 그 아이는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치유 받거나 해결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되어 학교로 되돌아 올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장에서 경험한 여러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위기학생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귀찮고 힘든니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식’, ‘폭탄 돌리기식’ 해법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설명 그 아이가, 학교에서 내놓는 그 무슨 처벌이나 대책도 먹지 않는 ‘꼴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선생님들 중의 누

군가가 그 아이의 아픈 사연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가운데 성장기 아이들의 잠재력을 믿고 기다려 준다면 언젠가는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재성의 꿈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위기학생들 대부분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버려지거나, 주변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못한 아이들이다. 사랑과 관심, 용서와 배려를 특성으로 하는, 학교라고 하는 교육공간에서마저 그들을 품어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국 학교 밖으로 내쳐질 것이고, 스스로를 누구에게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적 인간으로 낙인찍기에 이를 것이다. 이는 그 학생 개인의 불행은 넘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국가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올해도 벌써 어느새 5월로 접어들었고 어김없이 스승의 날은 다가오고 있다. 아이들은, 어찌렇게 돌아가는 세상을 아는지 모르는지, ‘스승의 은혜 하늘 같다’며 노래를 불러주고 꽃을 달아줄 터인데 스승의 사랑을 묵발라 하는 그들 앞에서 교육자의 보람과 긍지를 얘기한다는 게 웬지 부끄럽기만 하다.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한분 한분이

분명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역할을 다한다고는 하는데, 교권이 추락하고 공교육에 전반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지는 까닭이 무엇인지 말기만. 생각된다.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적 전문지식이나 경륜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모든 학생이 일류대를 갈만큼의 공부를 못 가르쳐서서 더더욱 아닐 것이다. 어쩌면 가정에서 부모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그래서 누군가 아이들의 건강한 심성을 더 튼튼하게 가꾸어주고 나아가 사람다운 사람으로의 바람직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끌어주었으면 하는 사회적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은 아닐지... 학습지도에 힘쓰라, 위기학생의 증가 속에서 생활지도의 어려움까지 감내해야 하는 선생님들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힘들어도 애써 어려운 길 가는 자신의 사랑과 헌신 속에서 비로소 아이들이 행복해진다 는 교육자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드높여 나갈 때, 아들에게 해내는 수많은 위기 청소년들이 방향을 끌고도 저마다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

社說

지역특화발전특구 정부 지원 뒷받침돼야

정부는 지난 2004년 전남처럼 개발이 뒤떨어진 곳의 특성을 살려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사업 활성화의 관건인 예산과 세제 지원, 기반시설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대부분 결실고 있다고 한다.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전남 지역 22개 시·군에서는 35개의 지역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전국 175곳 가운데 최초로, 전남도와 일선 지자체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선 결과다. 그러나 10년이 흘렀어도 성과는 별로 없다. 지역 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영광 보리산업, 완도 전복산업, 보성 녹차 산업 특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주민 소득과 일자리가 일정 부분 늘어 우수 사례로 꼽혔다. 그렇지만 나머지 특구의 경우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정부가

해 주는 것은 수의계약 허용, 간판을 확대 등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것뿐이다. 가장 절실한 사업비는 지자체가 알아서 확보해야만 한다. 정부 기관의 특구사업 관련 재정 정책 수립 협조 지침도 ‘권고’ 수준이어서 별 효과가 없다고 한다. 이러니 가뜩이나 기반시설이 미흡하고 재정이 열악한 전남 지역 시·군 입장에서 특구 활성화에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어렵사리 특구 지정에 성공하더라도 민자유치나 자체 예산 마련에 실패하면 사업은 한걸음도 나갈 수 없는 형편이다. 현장에서는 선심 배움 듯 행정 규제만 완화해 준 후 뒷집지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다. 보다 못한 전남도가 최근 관련 기관과 함께 지구책으로 특구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이 제도를 통해 균형발전을 꾀하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역 여건에 맞는 선별적 지원으로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너지는 교권’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나

교사들이 학생들의 폭력이나 성희롱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심지어 학부모까지 가세해 학교에서 행패를 부리기도 한다. ‘꼴버지네요’ ‘똥매가 좋네요’라는 등 성희롱 발언까지 하는 학생도 있어 이를 견디지 못하고 교단을 떠나려는 여교사도 적지 않다고 한다. 교육 현장의 이런 시글픈 현실은 광주·전남 지역이 아니라 해서 예외가 아니다.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전남 지역 교권 침해 사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99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전년도에 비해 10건이나 늘었다. 이중 학생의 교권 침해 사건이 90건으로 지난해(84건) 보다 6건 늘었고 학부모에 의한 침해(9건) 사례도 전년(5건)에 비해 증가했다. 광주시교육청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도 135건에 달한다. 육설·폭언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 방해 27건, 지도 불응 22건, 성희롱 2건, 폭행 2건 순이었다. 교육부가 집계한 교권 침해 사

례 역시 지난 2009년 1570건에서 최근 연간 4000~5000건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이 수치는 접수된 사례일 뿐이고 실제 교권 침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게 교단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교권 침해가 늘어나면서 교원의 권위와 사기가 떨어지자 교육계 일각에서는 기존 교권 보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구속력 있는 교권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을 제정해 학생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교원과 학생 및 학부모 간 신뢰가 상실돼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 당국의 교권 회복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정에 서도 교사의 권위와 존엄을 존중하도록 하는 방상머리 교육에 나서야 한다.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지고 결국 국가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無 等 鼓

가득권은 사람과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아니다. 가득권이 보장해주는 것이 많을수록 유혹도 덩달아 커지기 마련이다. 최근 불거진 로스쿨 파동은 가득권의 치명적인 유혹을 잘 보여 주는 사례다. 교육부가 전국 25개 로스쿨의 지난 3년간 입학 전형 6000여 건을 조사한 결과 합격자 중 24명이 자기 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법무법인 대표’처럼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대입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과목인 수학·영어의 경우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퍼져 대기 번호표를 발급하는 유명 학원들은 한 달 수업료가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50만 원을 육박하는 곳까지 찍었다. 극히 일부이겠지만, 한 달 수업료가 100만 원에 이르는 고액 과외를 받는 아이들도 없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또한 대학에 수시로 합격하려면 필 요한 각종 스펙을 쌓는 데도 초등학교

때부터 알게 모르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결국 그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례도 19건에 달했다. 합격에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 권력 계층으로 꼽히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지위까지도 이용하는 유혹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가득권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자리’는 숫자가 한정되어 있으니 경쟁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르면 유치원, 늦어도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이 시작되는 데다, 부모의 ‘재력’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